

서비스 피해 예방 앱 내와

방통위, 무료 배포

통신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방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 방법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피해예방 매뉴얼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예방 매뉴얼 앱'은 △피해예방 매뉴얼 △피해구제기관 안내 △웹툰 3개 메뉴로 구성됐다. 피해예방 매뉴얼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휴대폰대출사기 등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구제법을 소개한다. 피해구제기관 안내는 피해 발생 시 빠르고 쉽게 구제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피해구제 관련 기관 전화, URL을 클릭하면 자동 연결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디지털타임스

2014년 04월 23일 수요일 008면 정보통신

방통위,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앱 배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피해예방 매뉴얼 앱'을 22일 무료 배포했다.

이 앱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및 구제법을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빠르고 쉽게 구제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피해구제 관련 기관 전화, URL 클릭 시 자동 연결하며 ▲일반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만화형태로 피해예방 요령

을 제시했다.

이 앱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의 모바일 앱마켓에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통신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앱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아시아투데이

2014/04/23 수요일
018면 디지털2.0

방통위, 통신피해예방 앱 무료배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피해예방 매뉴얼 앱'을 개발해 무료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바일 앱은 총 3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먼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구제법을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빠르고 쉽게 구제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피해구제 관련 기관 전화, URL을 클릭 시 자동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형태로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 등에서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2종으로 개발해 플레이스토어(구글), 앱스토어(애플), T스토어(SK플래닛), Olleh마켓(KT), U+스토어(LG유플러스) 등의 모바일 앱마켓에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다. /윤복음 기자

방통위 “과열 이동사만 번호이동 제한 검토”

전면 차단 방식보다 이용자 편의 고려
익일 3~5일간 상한 30% 낮추는 수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과열 촉발 사업자 위주로 시행을 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 가운데 각사의 일일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 3사는 자율적으로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역시 과열 주도 사업자 위주로 시행해 과열이 이뤄질 경우 각사 한도의 20~30%를 낮추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열이 일 경우 바로 번호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상 과열 사업자만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모니터링 단위 기간 중 과열이 일 경우 번호이동이 가장 많은 곳을 주도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평균적으로 이동사들의 번호이동 수준이 과열 현상을 보일 경우 주도 사업자에 대해 다음날부터 3~5일간 번호이동을 패널티 차원에서 각사 상한의 30%를 줄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이동사들은 검토 중이다.

이동 3사의 번호이동 수준이 과열 기준을 넘을 경우 다음날부터 주도 사업자에 대해 제한이 가해져 상한까지만 허용하게 된다.

과열 주도 사업자의 일일 번호이동 상한이 1만건으로 정해졌다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경우 3~5일간 하루 번호이동이 7000건을 넘어가면 차단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주식시장에서 과열이 일 경우 바로 시장이 멈추도록 하는 원래의 서킷브레이커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번호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방안이다.

모니터링 시 과열 징후를 파악하는 평균 번호이동 수준은 현 수준인 일일 2만4000건에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3만건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열을 판단하는 모니터링 기간 단위는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효과가 적을 수 있어 하루나 이틀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경우 각사의 일일 번호이동 상한은 총 과열 상한 수준에서 5:3:2의 점유율과 3분의 1의 공정한 배분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7000건에서 1만건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경우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약가입 등이 이뤄지기 어렵게 3~5일 사이로 기간을 두고 제한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한선 기자 griffin@

이통 ‘서킷 브레이커’ 부작용 크다

<휴대폰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 추진 중인 ‘휴대폰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 브레이커)’가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자율제한제는 실효성 논란에 이어 담합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시행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휴대폰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이동통신3사간 과열 경쟁으로 번호이동이 급증할 경우 통신사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성준 위원장이 지난 15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3사 CEO 합의에 따라 5월 이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공론화 됐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우선 보조금 차별지급 문제와 별개로, 건전한 시장경쟁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시장경제·현실 무시 경쟁활성화 역행 지적
과열기준 인원 1개사가 등록뎌 영업 올스톱
통신3사 합의해 시장개입 담합 가능성도 제기

지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번호이동 건수는 보조금 지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문제로 삼는 보조금 차별지급 대신 번호이동의 결과만을 놓고 차단하겠다는 것은 경쟁 활성화에 어긋나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과열의 근거로 삼고 있는 2만4000건이라는 시장과열 기준도 근거가 없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번호이동 건수는 최근과 같은 영업정지 기간에는 1만여

건에서 지난해는 일평균 2만5000건,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지난 2월의 경우 월평균 4만건까지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열 기준에 대해 업계가 합의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자의적인 제한이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2만7000건으로 잡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넘긴 날은 휴대폰을 구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통신사들이 다른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기 위해 악용할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준히 제기된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휴대폰 번호이동은 시장과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경쟁 활성화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유효경쟁정책을 통해 시장문제를 풀어가야지, 경쟁의 결과인 번호이동을 임의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공익보다는 행정편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또 업계의 자율적인 제한이 담합(카르텔)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시장 과열경쟁 억제라는 정책목표가 있다고 해도 법률을 거치지 않은 채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해 시장에 개입하는 형식은 경쟁 제한요소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3사 합의에 따라 특정 판매량 또는 비율이 정해진다면 카르텔 요소는 있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가 시행도 되지 않고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입장을 내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이통3사, 시장 안정화 ‘자정 약속’ 한달

‘특단의 대책’ 유명무실 정부 “강제이행안 추진”

단말기값 인하도 제조사와 갈등

22일로 이동통신3사가 모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실제 시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고시나 강제성을 띤 자율이행안을 만들어 대책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는 지난달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통시장 안정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협력에 착수했다. 당시 불·편법 보조금 지급 중단, 공동 시장감시단 운영, 단말기 가격인하 추진 등 5개 항목의 ‘특단의 대책’을 공개하고 자율적으로 자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 살포로 정부로부터 45일씩 영업정지를 받았다. 대책 발표 전후가 영업정지 기간이어서, 번호이동 수치 등으로 시장 안정 여부를 따지기는 부적절하다. 이통사의 노력에 의한 안정화 단계라기보다는 반강제적인 시장 ‘냉각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이통시장에서 냉각기야말로 협력해 대책을 추진하기엔 최적의 시기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이 제시한 대책은 대부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활동을 시작한 공동 시장감시단은 사실상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다. 각 업체가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정지 위반행위 의혹사례를 서로 모아 상호 검증하고 자율시정한다는 게 감시단 발족의 취지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감시단 출범 후에도 경쟁사 불법 영업문제를 공공연하게 제기했다. 감시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급기야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지난 14일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자중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이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 의심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이통사들 모두 “조작된 자료”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단말기 가격 인하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팬택의 ‘베가 시크릿업’ 판매가를 일방적으로 깎고 나서면서 갈등 조짐이 보이자 방통위가 조사에 나섰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 전 가능하면 추진키로 했던 보조금 공시나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가능제’ 도입 등도 별다른 진전 소식이 없다.

정부도 이통사들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이달 중 관련 고시 제정이나 강제 이행을 통해서라도 대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단말기 유통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보조금 공시나 선택가능제,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 등 법의 주요 사안들은 고시로라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질차상 문제 등을 방통위와 협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고시제정이 어렵다면 이통사들이 약속한 ‘특단의 대책’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준수하도록 이행안을 만들어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SK텔·KT ‘점유율 전쟁’

27일부터 단독영업 KT 공세

불법 보조금 관련 영업정지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이 점유율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통 3사가 45일씩 불법 보조금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SK텔레콤이 마지막으로 ‘매’를 맞으면서 LG유플러스와 KT가 잇달아 가입자를 빼가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SK텔레콤을 쓰고 있는 만큼 경쟁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기 쉬운 구조다.

22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단독 영업을 했던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4만4027명(번호이동 순증)의 경쟁사 가입자를 뺏아왔다. 단독 영업 영향으로 3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전월(50.09%) 대비 0.2% 증가한 50.29%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4월 5일부터 단독 영업을 시작한 LG유플러스가 일평균 8200명, 총 13만9332명(21일까지)을 번호이동으로 유치하면서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KT가 오는 27일부터 단독 영업을 시작하는 만큼 SK텔레콤 50% 점유율 사수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KT는 단독영업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단축한 것도 영업 준비를 조기에 마치고 매달 떨어지는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다.

결국 SK텔레콤은 남아있는 영업정지 기간(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와 KT의 실적을 손놓고 지켜 봐야 하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4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0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동훈 기자**

이번엔 출고가 인하 경쟁 ... 갤럭시S4 미니가 공짜

KT, 27일 영업 재개 앞두고
옵티머스GK 등도 인하 추진

번갈아 영업정지 징계를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2일 통신·전자업계에 따르면 27일부터營業을 재개하는 KT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4 미니(출고가 55만원·사진) 가격을 50% 인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모두 지원받으면 소비자의 실부담액이 5000원으로 떨어져 사실상 ‘공짜폰’에 가까워진다. KT는 또 LG전자가 KT 전용으로 출시한 중급 스마트폰 옵티머스GK(출고가 55만원) 가격도 50% 가까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초 출고가 79만9700원에서 올 2월 한 차례 출고가를 내렸던 옵티머스GK는 출시 1년 만에 값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KT 관계자는 “삼성·LG 등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며 “최종 가격과 인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단독 영업재개를 앞두고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KT가 묘안을 찾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할인 대상인 두 모델은 지난해 KT 전용폰으로 출시됐다. 다른 통신사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KT의 발언력이 센 편이다. 제조업체도 이통 3사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다른 단말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기가 수월하다. KT 영업정지 기간(45일) 동안 창고에 쌓여 있던 재고를 털어낼 기회이기도 하다. 비슷한 이유로 LG전자도 이달 5일 LG유플러스 영업 재개에 맞춰 전용폰인 옵티머스Gx(출고가 89만9800원)를 63만8000원으로 29%가량 인하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단말기 값 할인은 이통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기간에는 거



의 없었던 일이다. 구형·보급형 모델의 값을 내리기보다는 신형·고가 모델에 불법 보조금을 많이 주는 편이 가입자 유치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조금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야 했기 때문에 차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영업정지 징계로 불법 보조금을 예전처럼 대놓고 쓰기 힘들어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값을 깎기 시작한 것이다. 재고 부담이 커진 제조사들도 가격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달 18일 LG유플러스와 KT가 팬택의 90만원대 스마트폰 베가 시크릿업 가격을 일방적으로 37%가량 인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와 영업정지가 겹치는 바람에 재고 문제로 골치”라며 “싼값에라도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갤럭시S5를 출시한 삼성전자에 이어 팬택도 조만간 아이언2를 출시한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G3를 6월께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갤럭시S5가 기존 단말기 값을 더 떨어뜨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출고가가 86만6800원으로 기존 프리미엄급 단말기보다 10만~20만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인하 시기는 이통3사 영업정지 징계가 끝나는 5월 1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갤럭시S5 가격이 앞으로 출시될 단말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 거품이 빠지는 추세가 확산되면 소비자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african@joongang.co.kr

LGU+, 팬택 출고가 인하효과 ‘미미’

단독영업 불구 가입자 증가폭 낮아... 또다른 ‘대책 카드’ 내놓을 가능성

LG유플러스가 팬택 스마트폰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인하하며 가입자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독영업 종료 나흘을 남기고 가입자 모집에 총력을 쏟을 LG유플러스가 꺼내들 다음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일일 순증 가입자는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를 인하한 18일에 8205건을 기록했고, 주말을 포함한 19~21일에 2만4057건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주중 순증 가입자가 7000건 대로 떨어진 것에 비해 1000건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9000건 대 안팎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했던 초기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주말의 경우 단독영업 이후 줄곧 기록해 왔던 2만4000여건을 그대로 이어갔다.

출고가 인하를 시작한 날 1000여건의 소폭 증가가 이뤄진 것도 가입자가 몰리는 금요일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 주 금요일인 11일에는 9555건을 기록, 전일보다 1600여건 더

이통3사 일일 가입자 순증 현황 (4월기준)

구분	SKT	KT	LGU+
※5~7일	-16,091	-8,313	24,404
8일	-6,276	-2,997	9,273
9일	-5,640	-2,928	8,568
10일	-5,143	-2,801	7,944
11일	-6,149	-3,406	9,555
※12~14일	-15,288	-9,009	24,297
15일	-5,102	-3,027	8,129
16일	-4,948	-2,843	7,791
17일	-4,472	-2,637	7,109
18일	-5,176	-3,029	8,205
※19~21일	-14,973	-9,084	24,057
계	-89,258	-50,074	139,332
일 평균	-5,250	-2,946	8,196

※주말가입자는 월요일 전산 처리

출처: KTOA

많은 가입자 유입이 있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팬택과의 마찰을 빚어가며 서둘러 출고가를 인하한 것에 비하면 효과가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LG유플러스는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를 95만4800원에서 37% 내린 59만9500원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팬택 측은 재고 보상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이와 관련 양측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고 보상비를 분담할 경우 팬택의 채무 부담이 늘어나고, LG유플러스가 대신 부담할 경우 판법 보조금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LG유플러스가 전격적으로 출고가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로 인한 가입자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출고가 인하 이후 해당 단말기의 판매량이 8배 증가했다”며 “출고가를 인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단독영업이 나흘 남은 가운데 가입자 확대를 위한 막판 스퍼트를 가할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알뜰폰 업계 '미디어로그 막기' 여론전

공청회 열고 시민단체 등과 공조

알뜰폰(MVNO) 업계가 이동통신사업자(MNO) 자회사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여론전에 돌입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 관계자들은 최근 모임을 열고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등록 신청 후 30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해 그 전에 힘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미디어로그는 지난달 말 신청서를 냈고, 등록증 발급 기한까지는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공청회를 개최해 기존 이통 3사의 독과점,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시민단체에도 상황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등

록 신청 후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MNO 자회사와 MNO 간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모회사와 계열사가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면 경쟁 활성화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도 공조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KT가 자회사 KTIS와 KTCS를 활용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자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NO 사업자들은 기존 알뜰폰업체들에 비해 까다로운 등록 부가요건을 통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고 공정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후불 요금제를 늦게 도입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공정경쟁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상황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다. "일단 등록 신청을 했지만 서비스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진출 시기·요금제 등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디지털타임스

2014년 04월 23일 수요일 004면 경제

통신사도 지중화 비용 부담한다

지자체·한전과 통신선 공사비 분담 검토... 사업 좌초 위기 넘길듯

통신선 지중화사업 비용을 통신사들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전력, 통신사 등에 따르면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중화사업'의 비용은 지자체가 50%, 한전·통신사가 50%를 각각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중화 사업비는 2010년부터 지자체가 50%를, 한전·통신사가 50%를 부담해 진행돼왔다.

하지만 6개 통신사가 2010년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작년 말 대법원이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를 통신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통신사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통신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중화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했고,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까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 지중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올해 지중화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미래부는 통신사들을 설득했고, 통신사들이 사업비 분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중화 사업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종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한전과 함께 협의를 거쳐 통신사와 지자체, 한전이 각각 사업비용을 나누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지중화사업을 신청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 마포구·종로구, 경기 수원 등 67개로 사업 실시 예정지는 80곳이며, 총 사업비는 1140억6300만원이다.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절반인 570억 315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절반을 한전과 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 한전과 통신사가 50%씩 부담하는 관례에 비추면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285억

1575만원이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등 6개 통신사업자들은 강남구청이 지난 2006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일대 5.22km 구간에서 통신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간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선을 옮길 것과 공사비용을 분담할 것 등을 요구하자 공사비용을 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0년 강남구청을 상대로 원인자 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용어

◆지중화사업= 전선과 통

신선을 땅 속에 매설해 지중화하는 사업. 지자체가 지중화사업비용의 50%를, 한전이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가 2010년 제정됐으며, 이전까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청자가 사업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SK텔레콤, 보이스톡 통화품질 ‘꼴찌’

카카오, mVoIP 데이터 손실률 비교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 영향
말 끊겨 통화 불가능한 수준

SK텔레콤의 ‘보이스톡’ 데이터 손실률이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보이스톡 통화 품질이 최근 2년 새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나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손실률이 높을수록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

이는 카카오가 보이스톡 데이터 손실률을 측정하기 시작한 2012년 6월 1%대에서 되레 10% 포인트 이상 급상승한 수치다.

SK텔레콤의 mVoIP 차단 조치가 보이스톡 불통으로 측정돼 손실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3사 중 mVoIP 허용량이 최저 수준인 SK텔레콤은 mVoIP 차단 시스템 수

최근 3일간 보이스톡 데이터 손실률 현황 기상도 단위: %

		SKT	KT	LG+	일본	미국
4월 21일	연결상태					
	손실률	12.04	8.26	0.24	0.5	0.97
4월 20일	연결상태					
	손실률	12.12	8.41	0.28	0.49	0.69
4월 19일	연결상태					
	손실률	11.75	8.38	0.23	0.55	0.81

☀ 깨끗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손실률, 0%이상 3%미만)
☁ 대화는 가능하나 불편한 상태(손실률, 3%이상 10%미만)
☔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손실률, 10%이상)

자료: 카카오

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카카오의 보이스톡 현황 기상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의 보이스톡 데이터(3G·LTE) 패킷 손실률은 12.04%로 이동 3사 중 가장 높았다. 이어 KT(8.26%)와 LG유플러스(0.24%)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보이스톡 데이터 손실률 10% 이상이면 말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대화하는 데 문제없이 통화하려면 손실률 2% 이하여야 한다. 손실률이 3~9%라면 대화할 수는 있으나 말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여보세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에게 “여세요”라고 들리는 식이다.

SK텔레콤의 보이스톡 데이터 손실률은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1년 11개월 동안 단

70여일을 제외하고 모두 이동 3사 중 제일 높았다. 올해 들어서도 약 4개월 동안(12일간 제외) 줄곧 보이스톡 통화 품질이 가장 나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데이터 손실률이 50% 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보이스톡 통화 품질이 크게 좋아졌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손실률 1%를 넘긴 날이 없다. 2012년 7월 2일부터는 0~2%대를 유지하고 있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이동사도 지난 2년간 0%에 가까운 손실률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AT&T, T모바일 등 미국 이동사들은 0~5%대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카카오가 보이스톡 데이터 손실률을 일방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카카오가) 어떤 기준으로 손실률을 측정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이스톡 사용자들의 다양한 데이터 접속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홍성율 기자 sungyuil@

KBS '폭TV'에 출자 수신료 이중징수 논란

서울경제

2014년 04월 23일 수요일 A14면 산업

이슈 앤 뷰 지역 민방, SO대상 90억 손해소송 왜

“지역 SO에 SBS 방송 송출 콘텐츠 재전송 대가 받아야”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콘텐츠 재전송료 분쟁에 지역 민영방송사업자(민방)들도 가세했다. 91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청구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KNN), 대구(TBC), 대전(TJB), 광주(KBC), 울산(UBC), 전주(JTV), 청주(CJB), 강원(GTB), 제주(JIBS) 등 지역 민방 9개는 각 지역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 SO를 상대로 9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역 민방 9개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그동안 받지 못한 콘텐츠 재전송료를 보상받기 위함이다. 지난 1991년 SBS를 시작으로 도입된 지역 민방은 경인방송(OBS)을 제외하고 SB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지역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있지만 대부분 SBS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민방들은 자신들이 지역에서 SBS 방송을 SO에 송출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민방 관계자는 “SBS 자체 방송권

역에 속한 SO들은 콘텐츠 재전송료를 SBS에 주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 SBS 콘텐츠를 제공하는 민방에는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재전송료와 관련해 협상하려 했으나 계속 불발돼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블TV 업계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가입자당 콘텐츠 재전송료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SBS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의 가입자에 한해서 CP S(재전송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이 계열로 묶여있는 MBC와 KBS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SBS와 지역 민방 간의 특수 구조 때문이 이 같은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기된 손해배상 금액은 전체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중 SBS가 CPS를 받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271만 7,114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케이블TV 방송협회 관계자는 “콘텐츠 재송신료 관련 문제는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오랜 시간 지속 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내용을 파악해 업계 공동 또는 업체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콘텐츠 수익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상파 N스크린 서비스 업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수신료로 만들어진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상업적 용도로 시청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에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신료와 별도로 N스크린 이용료까지 책기면서 수신료 이중징수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BS는 최근 사내 이사회를 열고 폭TV를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CAP)에 수십억원 규모의 자본 출자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KBS는 사내 이사회에서 폭TV에 20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 진입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KBS는) 이르면 오는 8월 본격적으로 폭TV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KBS 관계자는 “KBS가 폭TV에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출자 규모, 향후 일정·계획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KBS가 연내 본격적으로 CAP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신료 이중징수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TV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N스크린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한 번 간접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방송 업계 일각에서는 KBS가 시청자에게 받은 TV수신료로 제작한 콘텐츠를 자사 수익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기치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KBS가 1TV와 2TV를 회계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 사업에 나선다는 것은 일반 시청자에게서 받은 TV수신료를 자사 수익을 올리는 데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KBS 관계자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수신료는 모든 시청자가 아닌 ‘TV수상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중부과 논란은 KBS가 받고 있는 TV수신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법에 의거한 TV수신료와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해 시청하는 VoD, N스크린 등 유료 서비스 이용 비용은 논의 대상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KBS는 폭TV와 병행해 자사 무료 N스크린 플레이어K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폭TV에 유료 콘텐츠를 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으로 K플레이어가 제공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활용해 공영성을 확보하겠다는 두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세월호 미군 잠수함과 충돌... 유족들 보상금받지 않나”

‘不信 증폭’ 소름돋는 SNS 괴담

혼란상황 악용 분노·의심 사회 부추겨

“세월호 덕분에 수능 경쟁자가 줄었다.” “유족들은 보상금으로 해외여행 갈 생각을 하니 좋겠다.”

경기도 분당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는 이정임 씨(가명·36)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악성 댓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파급력을 떨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힘을 빌려 악성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안산 학생들이 스카이(SKY)대 많이 갔네” “이번 사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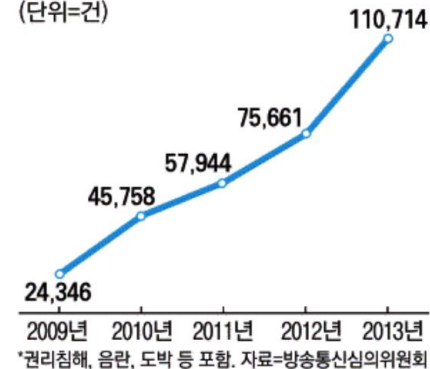
지방선거 판세를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부 음모” 등 황당하고 자극적인 댓글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관련기사 A4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물(음란 정보 등 포함) 심의 건수는 2009년 2만4000여 건에서 지난해 11만여 건으로 4년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SNS 시대에 이처럼 악성 댓글이 급증하는 이유를 ‘SNS 신드롬’으로 요약한다. 남의 불행이나 슬픔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매사에 부

급증하는 인터넷 불건전정보 심의
(단위=건)



정적인 심사로 뒤틀린 ‘네거티브(Negative)’, 자기 혼자만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 ‘자아도취(Self-complacence)’ 머리를 자를 만 것이다. 정보 교류 창구로 쓰여야 할 SNS가 악마의 ‘SNS 신드

롬’에 빠져 재난 상황에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며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몰고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댓글이 의혹을 증폭시키며 분노와 의심지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 이전의 국가 재난에서도 악성 댓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과장을 일으키는 나쁜 글을 쓰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홍장원·추동훈 기자

의원까지 퍼나르는 ‘유언비어 공화국’ ... 구조작업 대혼선



◆ 불신 틈타 온라인 오염 극심
정부가 초기 사고 대응에 실패하면서 불신을 자초하자 SNS 오염은 더 심각해졌다. ‘SNS꾼’은 실종자 가족들 마음은 물론 사고 수습 지휘 체계까지 뒤흔들고 있어 단순한 해방꾼으로만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17일 생존자가 있다는 SNS에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경찰 발신기록 확인 결과 선체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판명됐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자중지란에 빠진 구조 현장 혼란은 더 커졌다.

생존자가 있다는 SNS는 무사귀환을 바라는 국민이 열심히 퍼날랐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울린 꼴이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

수는 “사회에 대한 불만, 정신병적 문제 등이 직접적 원인”이라며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서 허위사실을 퍼나르는 평범한 사람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심지어 훈련하던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괴담마저 등장했다. 국내 SNS 문화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천안함이 미국 잠수함과 부딪쳐 침몰했다는 수준에서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한 셈이다. 아직도 SNS에는 ‘에어포켓(밀폐된 공간 중 공기가 존재하는 곳)’이 사실은 기름통이다’ 등과 같은 추측성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몰상식한 네티즌은 ‘보험금을 받겠으니 상관없다’거나 시신을 ‘고깃덩어리’로 묘사하는 등 사고 가족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현장 구조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31) 등을 불잡아 조사 중

③ 사고현장 해방꾼 SNS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 ‘선체 내부 식당에서 시체를 확인했지만 상부에서 꺼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가 문란시키는 유족충(蟲)들 전부 구속 수감해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한국 사회 치부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유언비어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SNS 루머는 세월호 침몰 직후인 지난 16일 선체에 생존자가 있는데 정부에서 구조를 거부한다는 음모론으로 확대됐다. 구조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인신 공격, 잠수함 ‘충돌설’까지 황당한 내용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에어포켓은 사실 기름통” 정부 불신에 괴담 확산 세월호 장사나선 정치인도 ... 피해가족 두 번 울려

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민간 잠수부인 것처럼 가장해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해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국민 14%가 정신장애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허위사실에 관심이 많은 사회적 풍토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온라인을 통한 사회병리 현상이 확산되며 국민의 마음은 멍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통계청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장애 평생유병률(담배·알코올 사용 장애 제외)은 2011년 기준 14.4%로 2006년 조사 때보다 2.1%포인트나 늘었다.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정신장애에 걸린다는 얘기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허위사실 유

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지만 관련 인력 부족 등 문제로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온·오프라인을 따지지 않고 적용되는데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훨씬 큰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 정치권에선 때아닌 색깔론
이 와중에 세월호 사고로 관심을 받으려는 정치인들이 가세해 SNS는 더 혼탁해졌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는 다른 사람 글과 동영상상을 게재해 구설에 올랐다. 권 의원은 첨부된 동영상상의 여성이 실제 실종자가족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제가 잠시 퍼온 글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해당 글을

심해지는 세월호 SNS 루머 강도

- 16일** 세월호 침몰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
- 17일** ‘선체 내부 식당에서 시체를 확인했지만 상부에서 꺼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 19일** ‘국가 문란시키는 유족충(蟲)들 전부 구속 수감해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 22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자들이 있다’는 SNS 글 자신의 페이스북 게재 후 사과

삭제했다. 20일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간접 비난한 데 대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고 주장했다가 구조에 집중해야 할 때 때아닌 색깔론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장하나 의원이 17일 트위터에 “선내 진입 등이 어떻게 더 내려 될까. 이 정도면 범죄 아닐까?”라는 글을 올려 구조대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을 받았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막내아들 예선 씨(19)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민이 미개하니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는 글을 올려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김정환·정의현·김수영·조희영 기자

‘폭동 유도’ 징역4년... ‘회사대표 모욕’ 위자료

표현자유 중시
美·유럽도
악플엔 엄격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악의적 게시물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혐오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되기도 한다. 2011년 영국 체스터시 법원은 SNS를 통해 폭동을 유도하는 글을 유포시킨 청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청년들은 게시물을 올린 다음날 ‘농담이었다’며 글을 내렸고,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시민에게는 공포를, 경찰에는 중대한 긴

장 상태를 야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법원은 한 회사 훈련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회사 대표를 조롱하고 모욕한 사건에 대해 2500유로(약 358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했다. 이 판결의 근거는 격리됐다고 주장하는 공간이라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단순히 불쾌하고 부적절한 수준을 뛰어넘어 근거 없는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에 제동을 거는 자발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제치고 방문자 수 1위 인터넷신문으로 떠오른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지난해 웹사이트 실명제를 실시하며 악성 댓글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손유리 기자

‘악플 횡포’ 해법없나 포털 자발적 실명제·가중처벌 도입해야

반복되는 악성 댓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2012년까지는 ‘인터넷 실명제’가 하나의 해법이 되기도 했다. 방문자 10만명 이상 대형 게시판 사이트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글을 게시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그러나 2012년 위헌 결정으로 폐기됐다. 당시 이 법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한 가치로 봤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업자 스스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무분별한 유언비어나 악담 등을 올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얘기도.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스마트폰 이용자가 대부분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사실상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포털이 이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네이버·다음 등 국

내 주요 포털 입장에서는 실명제 도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위한 결정을 받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간단치 않다”며 “더욱이 네티즌으로부터 ‘인터넷을 규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것 같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7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악성 댓글이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홍장원·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2014년 04월 23일 수요일 A15면 IT

세월호 이후 3배 늘어난 스미싱 대처법은

금융 앱 대체해 비번 빼돌려…문자속 URL클릭 금지

세월호 침몰 사고 정보를 가장 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서비스 관련 사기 경보가 들어왔다.

스미싱 피해는 모바일뱅킹서비스, 소액결제 이용자에 집중되고 있다. 한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스미싱 신고가 평소에 비해 2~3배 늘어났다.

가장 많은 수법은 기존 스마트폰에 깔려 있던 은행앱을 가짜앱

으로 대체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세월호 침몰 그 진실은…http://ww.tl/news’ 등의 문자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가짜 은행앱이 깔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앱을 새로 깔겠느냐는 질문이 뜨지만 반드시 앱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메시지가 떠 이용자가 클릭하기 쉽다.

이 경우 가짜앱으로 금융거래

를 할 때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2차 피해가 일어나게 된다.

소액결제의 경우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사용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정보를 빼낸다. 소액결제할 때 입력한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가 하지도 않은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뱅킹이나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스미싱 피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탈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지 않고 스마트폰 ‘설정→보안’ 메뉴에서 ‘알 수 없는 소스’를 받지 않겠다고 설정해놔야 한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백신 앱을 깔고 스미싱 차단 앱도 내려받는 것이 좋다”며 “백신 앱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 기자

고객정보 유출 ‘쇠방망이’... 1건이라도 새면 직원 징계

금감원, 제재 강화 세척 예고

앞으로 개인정보를 단 1건이라도 유출한 금융회사 직원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견책(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는다. 5건 이상 유출하면 감봉(문책성 경고), 50건 이상 유출 시에는 정직(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국민적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쇠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는 원칙으로 경각심을 높였다.

우선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도용·유출당한 주체가 동일인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기로 천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정보주체의 수에 유출 횟수를 곱해 유출 건수를 산출하기로 한 것이다. 부당이용 건수는 정보주체 수에 이용일수를 곱해 따지기로 해 기간이 길어지면 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도록 했다.

50건 이상 유출때 정직... 담당 임원도 책임 묻기로 고의·중과실 금융사 업무정지... 외부해킹도 문책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전 금융권에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시행세칙에 없던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에 관한 제재 양정기준이 신설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위반 성격과 형태, 위반 건수, 고객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양정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들의 책임도 한껏 강화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에게 정보보호 관련 조치 필요사항을 보고했다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소관임원에게 행위자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임직원뿐 아니라 금융사의 행위자 책임

제재양정	부당이용	유출
업무정지(정직) 이상	500건 이상	50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	5건 이상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	1건 이상
주의	1건 이상	-

*부당이용 건수는 정보 주체수와 이용일수의 곱.
유출 건수는 정보 주체 수와 유출 횟수의 곱으로 따짐

개인정보부당이용유출에 대한 제재기준

원인	정보보호 소홀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중과실인 경우		정보보호 소홀 정도가 가볍거나 낮은 과실인 경우	
	기관	임직원	기관	임직원
중대	업무정지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문책경고(감봉)
보통	기관경고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주의적경고(견책)
경미	기관주의	주의적경고(견책)	-	-

(자료: 금융감독원)

도 가볍지 않게 적용된다. 금감원은 정보보호 소홀 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인 경우와 경과실인 경우로 원인을 나누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부당이용 등의 결과는 위반 경로·건수·사회적 물의 정도에 비춰 중대·보통·경미로 구분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인 경우 정보보호 소홀의 결과가 중대했다면 그 금융사는 업무정지된다. 임직원도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

를 받는다. 금감원은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초래한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한 것으로 규정했다. 외부 해킹은 불가항력이라며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스로를 변호했던 기업들은 앞으로 IT·보안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한편 금융 권역별로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은행 부문에서는 이른바 ‘썩기’로 불리는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 행위’ 금지위반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동양 사태로 주목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 양정기준을 세분화했다. 보험 부문에서도 특별이익 제공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

적·반복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정비했다. 개인은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기관은 조직 규모에 관계없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제재하겠다고 했다. 상호금융조합 분야에서는 신탁의 무자격 조합원 가입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 비율 과대계상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바이두에 쳐보면 다 나와” 개인정보, 韓 최대 수출품?

해외사이트에 1400만건 유출... 실제로 더 많아

유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수십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내에선 이미 ‘개인정보=공공정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글, 바이두 등 해외 유명 검색사이트에서도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담긴 한국인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떠돌면서 “한국 최대 수출품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옥션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래 최근까지 국내에선 총 19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기간 유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는 총 2억2073만 17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내에서 스팸, 스미싱 등에 활용되며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 인터넷 망에도 유출된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통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검색만으로 손쉽게 이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중국의 네이버로 불리는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인 이름·주민등록번호’라고 검색하면 한국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와 블로그로 연결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내국인으로 한국 게입사이트를 가입하려는 수요가 많아 이를 적극 활

용하려는 이용자가 많다. 중국 포털 바이두의 회원수는 6억명에 달한다.

미국 검색사이트 구글 검색창에 ‘name kssn (Korea Social Security Number)’를 검색해보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얻는 방법(How to get a kssn) 혹은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공짜(free kssn)가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된다.

김영주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해외 사이트에 유출된 한국인 개인정보는 약 1400만건에 달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는 해킹동아리와 인터넷 정보화 학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최소한 확인된 수치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가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국내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대신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연산암호 등을 사용해 이중로그인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휴대폰 본인인증확인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량은 기술적으로 파악이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인터넷진흥원과 중국 인터넷협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서 중국 웹사이트에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JTN미디어 홈페이지 뚫렸다...8만명 회원정보 유출

락다운 “허술한 홈페이지 관리 원인”

국내 유명 가수 콘서트 등을 주최하는 문화 마케팅 회사 JTN미디어(www.jtnevent.com)가 보유한 회원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약 8만명에 달하는 정보가 빠져나갔으며 허술한 홈페이지 관리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화이트해커그룹 락다운은 JTN미디어 홈페이지가 누구나 주소만 알면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취약점에 노출됐다고 22일 밝혔다. 락다운은 해커 동향을 추적하던 중 JTN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해커는 JTN미디어 고객 정보 8만여건을 엑셀파일로 저장해 빼돌렸다. 빠져

나간 개인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JTN카드번호, 카드 만기일, 이메일, 티켓 교환 내역 등 20건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APT 공격,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JTN미디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해 저장해야 하는데 그냥 저장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을 지키지 않았다. 락다운은 JTN 보안담당자는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사이트에 대한 세션과 쿠키 값을 검증하지 않아 누구나 홈페이지 주소만 알면 접속해 개인 정보를 유출하

게 했다고 설명했다. 락다운은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만 접속하도록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대상자를 파악해 2차 피해를 막사 데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JTN미디어는 1981년 중앙일보 영레이디 정기 구독자 유치와 독자 관리를 위한 사업본부로 출발한 회사다. 중앙일보 정기간행물 독자를 위한 콘서트와 강연회를 진행했으며 2012년 중앙일보시사 미디어와 계약이 종료돼 독립했다. 이 회사는 멤버십을 모집해 공연과 이벤트 초대 등의 사업을 한다.

이에 JTN미디어는 “해당 부서에 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지메일족’ 점점 느는데...

<구글 이메일 사용자>

이용자 정보보호는 미흡

해외서버에 저장... 해킹에 속수무책

‘메일 내용 자동 분석’ 검열 논란도

해외에 적을 두고 있는 구글의 이메일(지메일)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이 이메일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저장한다는 약관을 고지한 것을 계기로 지메일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메일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에 기본 앱으로 탑재되면서 국내 지메일 이용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3600만명을 넘어섰고, 지메일 앱이 기본 탑재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90%에 육박한다. 특히 업무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PC와 스마트폰 모두 연동 가능한 지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와 함께 국내 지메일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들의 보호책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구글은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국내도 이를 고지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구글은 이메일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저장한다. 구글은 이용자 이메일 분석과 관련해 검색결과, 맞춤 광고, 스팸·멀웨어 감지 등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자동검열’이라는 비

난을 받고 있다.

또 모든 이메일 내용이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해킹,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메일은 지난 1월에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등 관련 사고가 심심치않게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메일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구글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 본사가 없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지메일은 무료 서비스라서 데이터 손실이나 정보 손상 등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악성 ‘통합 금융앱’ 개인정보 탈취 경고

안랩, ‘뉴밴’ 발견...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각별 주의 이용자 몰래 스마트폰 공인인증서·문자 메시지 유출

국내 주요 은행, 증권사 및 카드사의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융정보 탈취를 노리는 악성 앱 ‘뉴밴(New ban)’이 발견됐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안랩(대표 권치중)은 22일 뉴밴이 이용자를 현혹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한다고 경고했다.

기존에 발견된 뱅킹 관련 악성 앱은 특정 금융사를 사칭해 정상 앱을 삭제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뉴밴은 국내 대부분의 주요 금융사 서비스를 사칭한 페이지를 하나의 앱에 모아놨다. 해당 앱에는 20개 은행, 21개 증권사, 10개 카

드사의 실명을 사용한 가짜 서비스 페이지가 있고, 각 페이지에는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카드번호 및 비밀 번호, CVC 번호 등 대량의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입력 창이 있다. 안랩 측은 “한 개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금융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을 클릭할 경우엔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고, 카드를 클릭할 경우엔 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 C 번호 등 이용자 금융 정보 전체를 요구한다.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를 클릭하면 증권사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증권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무심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해당 정보는 공격자에게 전송된다.

또한 이 때 추가로 악성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데, 이 추가 악성 앱은 실행 시 이용자 몰래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수신된 문자 메시지를 유출하는 악성행위를 한다.

안랩은 “이번에 발견된 악성 앱과 같이 금융사 전체의 서비스를 사칭해 각각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해당 악성앱은 구글 공식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 등록돼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악성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실행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환경설정에 있는 ‘알 수 없는 출처[소스]’의 허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스미싱 탐지 전용 앱이나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강은성기자 esther@

중국 해커에 뚫린 코웨이 홈페이지

빛스캔, 심어놓은 통계사이트 발견
방문자수 늘면 악성코드 공격 개시
개인·기밀정보 탈취 가능성도 높후

중국 해커들의 공격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국 해커들이 심어놓은 통계사이트가 발견됐다.

통계사이트가 발견됐다는 것은 이미 서버가 공격자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미다. 중국 해커들은 통계사이트를 통해 방문자 수를 세고 있다가 방문자가 늘어나면 악성코드를 심고 원격제어, 개인정보 탈취 등 공격을 개시하게 된다.

보안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해커들의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사이트에 대한 평소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2일 국내 보안전문회사 빛스캔은 최근 코웨이 홈페이지에서 중국 해커가 심어놓은 통계사이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통계사이트는 중국 사이트로 밝혀져 중국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중국 해커들은 코웨이 사이트에 심어놓은 통계사이트로 방문자 수를 카운트하다가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악성코드

Time	Sent	Received	Method	Result	Type	URL
0.976	284	45367	GET	200		http://www.coway.co.kr/
0.056	248	643	GET	200		http://www.coway.co.kr/css/import.css
0.354	260	95054	GET	200		http://www.coway.co.kr/inc/js/jquery-
0.405	246	1413	GET	200		http://www.coway.co.kr/css/font.css
0.466	247	2735	GET	200		http://www.coway.co.kr/css/reset.css
0.655	246	42093	GET	200		http://www.coway.co.kr/css/base.css


```

<script src="http://count25.5lyes.com/click.asp?id=250444562&logo=1" charset="gb2312"></script>
  
```

▲ 코웨이 홈페이지에서 중국 해커들이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통계사이트가 발견됐다

를 심어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재 이 통계사이트는 사라진 상태다. 중국 해커들이 공격을 끝내고 없앤 것인지 코웨이 관리자가 삭제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본지가 코웨이에 확인한 바로는 “서버 공격의 징후가 전혀 없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대응한 것으로 미뤄 관리자가 이를 발견하고 삭제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버를 장악했다는 것은 서버 내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계사이트 정도를 심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으로 기밀정보 탈취 등 다양한 공격이 이미 감행됐을 가능성도 높다.

코웨이는 정수기, 연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각종 생활전자제품을 판매한다. 이 같은 생활용품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벤트 등 사용자 위주 매뉴얼로 운영 중이다.

각종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증정하며 건강정보와 생활상식, 요리법 등 다양한 정보도 수시 업데이트해 주부들의 방문율이 높다.

빛스캔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비단 코웨이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들이 이 같은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정 기자 linda@

‘명퇴 후속조치’…KT, 조직개편 시동

대부분 명퇴자 몰린 지역고객본부 기능 통합 등 논의 규모·전직 인사 확정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가능성

KT가 대규모 명예퇴직에 이어 후속 조직개편을 서두른다. 대부분 명퇴자가 집중된 커스터머부문 지역고객본부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KT에 따르면 KT는 명예퇴직 이후 실시할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커스터머부문 지역고객본부 일부 기능을 합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무라인에서 후보 안이 정리되면 최고경영자 승인을 거쳐 실시된다.

커스터머부문은 4월 현재 수도권 3곳, 부산(경남), 대구(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나뉘져 있다.

KT 관계자는 “대부분 명퇴자들이 영업, 개통, A

S·고객응대(플라자) 등 커스터머부문에 몰려있다”며 “지역 거점 기능을 합치는 등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 2012년 현장조직을 11개 지역고객본부로 통합해 커스터머부문에 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직원 25% 이상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고객본부 조직의 개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KT는 이석재 전 회장 시절부터 인원감축을 전제로 지역고객본부 광역화를 광범위하게 검토해 왔다.

네트워크부문에 속한 네트워크운용단은 이미 2009년 6개로 재편했다.

KT 관계자는 “지역고객본부에 딸린 국사, 지사

등 하위 조직은 실질적으로 내방, 사후지원(AS)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통폐합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 슬림화보다는 KT 정규직 직원을 줄이고 자회사 비정규직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르면 명예 퇴직자가 최종 결정되는 5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4월 27일부터 단독영업이 시작되고 5월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순차 영업정지가 예상돼 명퇴자와 자회사 전직 인사발령이 나는 이달 말, 5월 초 사이 추가 조직 개편 가능성이 높다”며 “명예퇴직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을 전후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역고객본부 재편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명예퇴직에 따라 인원이 줄어 자연스러운 조직개편이 예상되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시소·오은지기자 siso@etnews.com

KT 특별 명예 퇴직 신청자 “4명 중 1명꼴”

황창규 “싱글 KT 본게임 지금부터”

퇴직 발령 서두르며 분위기 다잡기
27일 영업재개... 혁신 작업 가속도

“직원 4명 중 1명꼴.”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KT 특별 명예 퇴직 접수가 21일 마감되면서 집계된 수치다.

이날 KT는 832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T 전체 직원 3만2000여명 가운데 명예퇴직 대상인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2만3000여명이었다.

KT는 명예퇴직 절차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하루빨리 추스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퇴직 발령을 서두르고 있다. KT는 23일 인사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30일 퇴직 발령을 낼 계획이다.

퇴직 발령이 끝나는 대로 황창규 KT 회장의 혁신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황 회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KT 혁신과 관련해 “아직 드라이브를 세게 걸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 조기 마감으로 황 회장의 싱글 KT를 위한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오는 27일 영업재개라는 시장 상황도 황 회장이 KT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황 회장의 KT 혁신 다음 단계로 꼽히는 것이 계열사 통폐합이다. 황 회장이 지난 17일 계열사 CEO들을 불러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KT와 전 계열사가 한 몸처럼 ‘싱글 KT’가 되



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 글로벌 1등 KT를 실현 하자”고 당부한 만큼 향후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는 통폐합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이 KT 혁신을 서두르는 이유는 또 있다. KT 내외부에서 지적하는 느긋한 조직문화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KT에서 몸담았던 이들조차 “회사가 너무 느긋하고 속도감 있는 근무 환경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 다시 ‘1등 KT’를 주창하는 황 회장에게 느긋한 조직문화는 반드시 버려야 할 악습으로 인식됐다는 게 KT 내외부의 전언이다.

그러나 KT 내부의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혁신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다. KT 새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자발적 사표지만 내용은 명백한 해고였다고 우리는 확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KT가 기업으로의 지속성 발전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이번 명예퇴직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강요 행위에 대한 진상 파악도 필요하다. 이미 KT 새노조가 관련 내용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황 회장의 혁신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종호 기자 sunshine@

‘세월호’에 멈춘 국회 ... 경제법안 하반기 처리?

지방선거 코앞 ... 쟁점 좁히기 힘들 듯 안전관련법안 처리 위해 5월국회 검토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1주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지난 1주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데다 기초연금법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의견이 팽팽한 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나 오고 있다.

◆정무위 등 파행 거듭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했던 민생·경제법안 논의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아예 멈춰선 상태다. 주요 상임위가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7월 지급을 목표로 협의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휴대폰 단말기 시

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안, 정보유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시급한 정무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뒷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 노래를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할지 말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설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안 심사가 울스톱된 상태다.

19대 국회 들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법 개정안’에 가로막혀 다른 민생법안까지 공전하고 있다. 야당은 ‘보도채널과 종편채널에서 편성위원회 구성 시 노사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에 계류된 단말기 유통구

상임위별 처리 불투명한 주요 경제 법안

정무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기획재정위원회

-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 종교인 과세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교 인근에 호텔 설립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원자력방호방재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복지위원회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조 개선법은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해 일반 소비자들의 통신 관련 요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노사와 노정관계 개선안 등에 대한 입법화를 위해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

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안건들이 상임위에서조차 협의되지 못하자 여야는 24일 열릴 본회의를 29일로 미루기로 했다.

◆쟁점 법안 처리 늦춰지나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작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해를 넘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학교 인근에 노래방 주점 등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추진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은 본격적인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2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된 국회 계류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상임위부터 정상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국면에 돌입해 있어 이견이 큰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를 놓고 벌이는 정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의견이 갈리는 경제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 법안 논의가 무더기로 하반기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고재연기자 silver@hankyung.com

‘맞춤교육’ 빅데이터 전문가 키운다

미래부, 202명 아카데미 수료... 노하우 공유 위해 사례집 발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빅데이터(거대자료) 아카데미’를 통해 금융·의료·제조·유통·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가 202명을 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빅데이터 아카데미의 성과를 정리하고 기술·분석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한 ‘빅데이터 아카데미 우수 프로젝트 사례집’에서 아같이 밝혔다.

빅데이터 아카데미는 총 8주 교육과정 중 이론 강의(2주) 외에 ▲영화흥행 예측 분석 ▲상장폐지기업 예측 분석 ▲쇼핑몰 상품 트렌드 분석 플랫폼 등 36건의 파일럿 프로젝트 실습(6주)도 병행했으며,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상장폐지

기업 예측 분석’을 통해 실제로 정확한 예측을 보여 재무정보 서비스 업체로부터 추가 개발 의뢰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교육 연수 중 실시한 프로젝트의 발굴부터 개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과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구성됐다.

연수생들은 이 기간 중 실시한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현업에 복귀해 공공 및 민간 66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빅데이터 프로젝트 70여건에 참여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전문가 2기를 수료한 김훈동 신세계S.COM 과장은 교육 중 시행한 ‘온라인 쇼핑몰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현업에 적용해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종합쇼핑몰을 올해 초 오픈하기도 했다.

강성주 미래부 국장은 “지난해 빅데이터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 아카데미 세부 커리큘럼을 보완 중”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업무 여건상 교육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은 DB전문가 지식포털(www.dbguide.net)에서 볼 수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영업정지 기간 '나몰라라'식 이통사 횡포

박현준 IT부

지난 3월 27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5'가 국내에 출시됐다.

이동 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당시 유일하게 정상 영업 중이던 SK텔레콤이 출시를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질세라 24개월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갤럭시 S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삼성전자가 발표한 갤럭시 S5의 전 세계 동시 출시일은 4월 11일이었지만 한국만 조기 출시된 것이다.

SKT는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먼저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5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T는 남은 영업 기간에 갤럭시 S5를 통해 매출을 늘리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4월 11일 출시를 약속한 150여개국의 이통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갤럭시 S5의 국내 출시 전날인 3월 26일까지도 삼성전자 IM부문 신종균 사장이 조기 출시는 없다고 밝혔지만, SKT는 출시를



강행했고 삼성전자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8일, SKT에 이어 두 번째로 영업 중이던 LG유플러스는 팬택의 스마트폰 '시크릿업'을 출고가 59만95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조금의 법정 한도 금액인 27만원이 지원되면 시크릿업은 3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당초 팬택이 95만4800원에 내놓은 스마트폰의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경영상황이 악화된 팬택을 살리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팬택은 재고보상금·선 구매 약속 등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상营业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이통사가 제조사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들의 이 같은 돌출 행동은 시장 질서를 더욱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

들쭉날쭉한 스마트폰 가격에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 제조사는 이통사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이통사들은 당장의 매출 상승보다 소비자 and 파트너로부터 얻는 신뢰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phj@

디지털타임스

▶ 발언대

연초부터 금융권, 통신사 등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보도되며 누군가가 내 정보를 악용할 지 모른다는 극도의 위기감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보안 관리자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이은 사고가 보안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기업 내 정보보호 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업 내 정보보호 체계와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제도를 추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선결요소는 기업과 임직원 간 '온도차'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각 기업들은 보안 정책을 재정비하고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진 역시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사적인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임직원들 또한 예전에 비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예를 들어 업무용 PC에 보안시스템 적용하거나 보안점검을 시행하는 데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단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가 아니라도 여느



고인현

코오콤베니트
윤리경영팀 부장

정보보호 강화, 윤리의식이 먼저다

직원들의 업무용 PC에는 개인당 수십 GB 이상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이 중에는 꼭 필요한 문서나 자료들도 있지만, 회사 내부와 외부 곳곳에서 참고용으로 입수한 후 정리하지 않은 자료들도 상당수다.

결국 기업의 정보보호는 정책이나 투자 못지 않게 임직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나 파급효과만을 강조하기에 앞서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개인정보와 정보보호 그 자체에 대한 윤리의식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개인차원에서는 자신의 정보는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경쟁사나 타인의 정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낮은 의식수준을 버려야 한다. 또한 기업 내 보안 제도나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는 편의적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 기업차원에서는 경쟁 우위와 성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윤리 경영의 철학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지나친 경쟁 우위 확보 노력은 벤치마크 지상주의로 이어져 자칫 비공식적 루트를 활용해 경쟁 정보를 입수하도록 압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윤리보다는 성과가 우선이라는 그릇된 문화가 자리잡으면 정보보호는 영영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기고

주 정 민

전남대 교수 truejoo@paran.com



지역방송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논할 때, 종종 미국 지역방송을 사례로 든다. 미국 지역방송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꼭꼭 집어 제공, 철저하게 지역성을 구현한다.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지역 커뮤니티 공통 관심사와 의제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민의 서비스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지역의 일기정보, 공공기관 행사, 주민 공지 사항, 체육행사, 자녀의 학교 일정 등을 다룬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지역방송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시시콜콜해 보일지 모른다. 마치 동네에서 무료로 배부되는 주간 정보지 내용을 방송한다고 비웃을 수 있다. 지역방송도 중앙방송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방송해야

최종 수혜자는 지역민이고,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외면하는 지역성이라는 영역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케이블TV에서 지역정보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공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케이블TV가 지역매체라는 점에 착안,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양방향에 적합한 케이블TV 특성을 활용,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시작한 CJ헬로비전의 '우리 동네 사랑방'은 지역성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다. '지역의

지역방송의 역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민이 바라는 프로그램은 사소하지만 현실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다.

모두가 지역방송의 역할을 지역성 구현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역방송은 프로그램을 제작과정에서 주로 방송사와 제작자의 입장만을 반영한다. 제작자는 지역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방송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프로그램에 지역민의 이해관계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장비와 인력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어 지역민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프로그램은 세련되지 못하고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글로벌하고 전국적인 서비스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에 오히려 지역 밀착 서비스가 시청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 지역방송 서비스의

행정정보 '초·중·고의 각종 발표회', '생활체육 동호회' '동네 맛집'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리 동네 사랑방'은 지역 현실과 지역민 생활을 있는 그대로 콘텐츠화해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있어 지역채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콘텐츠를 VoD 형태로 제공해 이용자가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방송 중심의 지역방송 서비스에 변화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 3월이면 그동안 유예됐던 방송분야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다. 자본력이 있는 거대한 콘텐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진입, 콘텐츠 시장은 보다 경쟁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차별적이고, 시청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방송은 출발이 지역민을 위한 지역성 구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역 밀착적인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분노 당혹 패닉 조장하는 실로 폭력적인 재난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 보도, 부적절한 인터뷰 등을 내보낸 KBS MBC 등 지상파와 jtbc, MBN 등 전체 종편,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 등에 대해 보도 경위를 밝히라는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법적 제재를 내리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여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문제가 된 보도는 사실과 다르게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거나, 앵커가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가 숨진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질문, 가짜 여성 잠수사와의 거짓말 인터뷰,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 등이다.

방송심의규정(24조의 2~4)은 재난방송 시 엄격한 인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통계나 사상사·실종자 명단,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발표내용을 반영하고, 피해현장이나 피해자 가족 등의 모습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못박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보도를 보면 허위보도, 왜곡보도, 멋대로 보도가 줄을 이었다.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 근접사진

게재 금지가 국제적인 관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의 얼굴 사진이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명백한 초상권 침해다. 선장과 해경의 통화내용을 제멋대로 해석해 공격하고, 민간 잠수사들에게는 구조활동을 게을리한다고 뉘달한다. 엉터리 재난 보도였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해외 언론들의 재난보도와는 너무 대조된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 사진은 게재하지 않으며, 일본 언론은 사실보도만 하면서 괴멸 통곡 아비규환 아수라장 같은 단어는 아예 쓰지 않는다. 영국 언론은 런던 지하철 사고 때 피해자 수를 추정하지 않고 정부 발표를 기다렸다. 우리는 감성을 절제하고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되레 소금을 뿌리고, 전 국민과 사회를 공포 분노 좌절에 빠뜨리고 패닉을 극대화한다. 슬픔과 분노를 조용히 누그러뜨려야 할 언론이 오히려 국민적 패닉을 조장하고 트라우마를 확대재생산한다. 이런 후진성이 따로 없다. 정말 부끄러운 재난 보도다. 매뉴얼이 있으나 언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사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 브레이커)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 배경인 통신업체간 과당 경쟁을 규제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제도 악용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번호이동 서킷 브레이커는 증권시장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증시가 특정 호재나 악재로 인해 급격한 시세변동을 일으킬 경우, 일시 거래증지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과열을 막는 제도다. 통신시장도 하루 가능한 번호이동에 대한

이동통신사간 담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개통을 이통사별 협의를 통해 얼마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정책당국이 통제한다는 발상자체부터가 반 시장적이고, 탁상행정이다.

보조금 정책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기업의 마케팅 영역에 속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정해놓고, 이 이상 지급할 경우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자유 시장 경쟁에서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처럼, 이번 정책역시 번호이동 가입자를 일정 범위안에 가둬

번호이동 '서킷 브레이커' 재검토해야

상한선을 설정해 업체간 보조금 경쟁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표면적으로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큰 틀의 자율 제한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꺼플만 더 들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서킷 브레이커 시행은 하루 번호이동을 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그 상한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고, 일선 대리점 등의 가입현장에서 오늘 번호이동이 꼭 차서 가입이 안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약을 통해 다음 날로 넘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이동통신3사 가운데 한 곳이 인위적으로 하루 가입상한에 해당하는 가입자를 몰아서 아침 일찍 전산에 등록시켜 버리면 다른 2곳의 통신사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방지하려면 한 회사당 가입시킬 수 있는 상한을 또 정해야 한다.

규제의 빈 틈을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 방안이 나오는 식이다.

두면 시장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정책당국이 보조금이 갖는 산업적 선순환 기능을 배제하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은 통신산업의 생태계에서 성장의 에너지가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모바일 강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근저에는 보조금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단말기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든 것이 컸다. 물론 너무 빨리 단말기를 교체하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보조금이 없었다면 탄탄한 통신 내수 시장 구축은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 단말기가 수출 1위 품목이 된 것도 이같은 내수 시장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통신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져 왔지만, 그 기저에는 산업을 생각해야 한다.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흐르도록 해서 안된다. 그동안 정책규제를 통한 존재의 의미를 찾아 왔다면, 이제는 이를 내려놓고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

인사

금융·경제계 인사는 B6면

- ◆산업통상자원부<과장급 전보>▶국가기술 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장 장혁조
- ◆뉴스1▶경기남부본부 부장 윤상연 진현 권 이동희
- ◆CJB 청주방송▶보도관리본부장(이사) 이한목▶편성대외협력본부장(〃) 오영근 ▶미디어콘텐츠사업본부장(〃) 홍순목▶ 보도국장 이성덕▶경영기획국장 겸 정책 팀장 신준호

부음

▲강영부 별세, 강철웅 순천시청 정원 관리과 과장·강철영 동부대우전자 생산 혁신팀 부장·강철호 대신증권 반포지점 부장 부친상=21일22시 광주천지장례식장, 발인 23일9시, (062)670-0035
▲김문규 한국글로벌 사장 별세=18일23시 안양장례식장, 발인 24일9시, (031)456-5555
▲김수정 별세, 송승환 현대하이카다 이렉트 보상지원팀장 모친상=21일22시 평창의료원, 발인 23일9시, (033)330-4878
▲박옥영 별세, 양정길 순천시 홍보전 산과장 장모상=22일10시 조선대병원, 발인 24일9시, (062)231-8901
▲박종기 별세, 박양수 뉴스엔미디어 대표·박문수 트리플원 대표 부친상=22일9시11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6시, (02)2258-5940
▲이기성 前 서울체신청장 별세, 이원석 포르시따 대표·이호석 다호DNI 대표 부친상, 김범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 사무관 장인상=22일6시40분 서울아산

병원, 발인 24일5시50분, (02)3010-2265
▲이시우 별세, 이상용 미시간컨설팅 대표컨설턴트·이상현 웨이브 대표·이상철 사업·이상준 웨이브랩 녹음감독 부친상=22일11시10분 고대구로병원, 발인 24일7시, (02)857-0444
▲이춘금 별세, 이민부 현대유화 대표·이철건 前 송파구청 근무·이원건 모친상=22일17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9시, (02)2227-7563
▲임왕수 별세, 임덕래 ktcs 대표이사 부친상=22일6시30분 대전을지대병원, 발인 24일9시, (042)471-1652
▲정우환 前 성운기계 대표 별세, 정옥이 덕성여대 언어교육원 팀장·정미경·정재운 삼한시스템 근무·정은주·정재우 엔이아이디 근무 부친상, 이재경 신용보증기금 감사실 부장 장인상=22일5시5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10시10분, (02)3410-6903
▲한정순 별세, 이진수 경북도민일보 부국장 모친상=22일1시30분 울산병원, 발인 24일6시, (052)227-1024